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추진을 위한 여정: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향숙[†], 문만용[‡]

1. 머리말

최근 “한국판 스미소니언”과 “부산판 스미소니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국립중앙과학관의 국립자연사과학관과 문화재청의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¹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2022년 1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간하는 『과학과 기술』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사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자연사관, 인류관 등이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전시관에서 지구온난화, 팬데믹 등 지구적 자연환경 변화나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 이슈까지 포괄하기는 한계가 있어 국립자연사과학관 건립 추진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²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7)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국립자연사과학관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 9월 “(가칭)국립자연사과학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자연사과학관은 “자연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련 과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3.45-3.511>

[†] 국립중앙과학관, shs77@korea.kr /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mymoo_n@jbnu.ac.kr

¹ ““한국판 스미소니언” 이번엔 건립될까...국립자연사과학관 재추진”, 『조선비즈』, 2023. 9. 19.; “국립자연유산원 을숙도 건립 기대한다,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속도, 시·정지권 협력 2028년 완공 이루길”, 『국제신문』, 2023. 2. 9.

² 류준영, “People: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과학과 기술』 2022년 12월호, 4-9 중 8.

학기술자료의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명되었다. 한편으로 2023년 3월 제정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에는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문화재청 산하에 설립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은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처의 기관들이 국립자연사과학관과 국립자연유산원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스미소니언”이라는 수식어가 보여 주듯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은 공통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을 하는 기관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두 사업 모두 과학자들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1990년대 중반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했으며, 이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주도해서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시도의 흐름 속에 있다.³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⁴ 하지만 한국에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주장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는 1992년에 발표된 글이며,⁵ 이 글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1985년에 발표된 책이다.⁶ 그러나 2001년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사설 자연사박물관이 소규모로 상당수 존재하나 국제적인 공식 통계에는 보고의 누락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연사박물관의 존재

³ 1961년 설치된 공보부는 1968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고, 1990년 문화부를 거쳐 1993년 문화체육부가 되었다. 1998년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의 직접 인용이 아닌 한 이 부처의 명칭을 문화부로 통일해서 지칭하겠다.

⁴ 이미경, “국립자연사박물관 우리 왜 없지”, 『경향신문』, 2022. 12. 30.

⁵ M.A. Mares, “Natural History Museums: Bridging the Past and the Future”, in C.L. Rose, S.L. Williams and J. Gisbert eds., *International Symposium and First World Congress on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al History Collections* (Vol. 3) (Madrid, May 10-15, 1992), 367-404 중 380. 이에 따르면, 한국에는 모두 81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s)은 없지만 자연사박물관 관련 기관(natural-history-related organizations)은 3곳이었다. 흥미롭게도 같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북한은 박물관 총 수가 19곳에 불과했지만 한 곳의 자연사박물관을 갖추고 있었다.

⁶ K. Hudson and A. Nicholls, *The Directory of Museums and Living Displays, Third edition* (New York: Stockton Press, 1985), 595-598.

를 인정했다.⁷ 또한 한국과학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15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⁸ 하지만 이들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까지 사실상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로 치부되고 있다.

비록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긴 시간 동안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가 지났으며,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지도 이미 30년이 지났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이를 주도한 주체는 문화부였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설립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여정을 추적하면서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립과학관의 연원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긴밀하게 얽힌 서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한국의 과학관이 외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자연사박물관 설립 노력에 대해서는 주장자의 한 명인 이병훈의 꼼꼼한 회고가 있다.⁹ 여기에는 1980년대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이 제기될 때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역사가 상세하게 담겨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이병훈의 회고보다 더 넓게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서 202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과학관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자연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과학관에 대해 살펴본 후, 3절에서 전후 복구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 과학관의 재건과 이 과정에서 자연사박물관의

7 유경준 외,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1), 6.

8 한국과학관협회, 『2021년(2020년 기준) 전국과학관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21), 109-151.

9 이병훈,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국립자연박물관 추진의 현대사』 (다른세상, 2013). 이 논문에서 사용된 상당수 자료를 제공하고, 장시간 인터뷰(2022. 10. 19.)를 해 주신 이병훈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과 이 노력이 무산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4절에서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학계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과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반응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훑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서 현재까지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2. 자연사박물관의 씨앗: 박물학과 과학박물관

자연사(natural history)는 “자연 환경 속에서 식물과 동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개별 개체 수준에서 생태계까지 다양한 수준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생물의 동정(identification), 생활사(life history), 분포, 상호 관계 등에 중점을 둔다.¹⁰ 세계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의 32개의 국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자연사박물관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Natural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NATHIST)는 자연사를 “다양한 생물학적, 고생물학적, 지질학적 수집품의 수집, 보존, 연구 및 해석, 세계의 자연 유산과 자연 환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정의한다.¹¹ 이 같은 자연사 분야의 표본과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공간이 자연사박물관이다. 이 때문에 natural history를 자연사가 아닌, 자연학(自然學)이나 자연지(自然誌)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² 실제 natural history는 자연에 대한 학문, 자연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권에도 이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natural history에서 history는 역사가 아닌 서술 또는 묘사(description)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¹³ 따라서 최근 관련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박물관이

¹⁰ Steven G. Herman, “Wildlife Biology and Natural History: Time for a Reunion,”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66:4 (2002), 933-946 중 934.

¹¹ 국제자연사박물관위원회 홈페이지 (<https://icomnathist.com/about-us/>).

¹² 이병훈, 앞 책(2013), 354-355.

¹³ David J. Schmidly, “What It Means to be a Naturalist and the Future of Natural History at American Universities,” *Journal of Mammalogy* 86:3 (2005), 449-456 중 449.

natural history museum의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나 대부분 언론이 자연사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도 학자들이 자연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를 추적하는 이 논문에서도 자연사박물관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연사라는 표현 대신 박물학(博物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1922년의 교육령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는 박물학의 목표와 내용은 “천연물에 관한 지식을 주고 그 상호작용 및 인생에 대한 관계를 이해시키며 관찰력을 기르는 데 요점을 두고, 중요한 식물·동물·광물에 관한 일반지식과 인체의 구조, 생리 및 위생을 가르치고 적절한 실험을 하는 것”으로서, 동식물학과 보건위생은 물론 광물학도 박물학에 포함되었다.¹⁴ 당시 진행된 박물학 연구의 대부분은 동·식물학 분야였으며, 1923년 정식학술단체로 설립된 조선박물학회에서도 생물학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조선박물학회잡지(朝鮮博物學會雜誌)』에 실린 318편의 논문을 보면 분류학 분야에 속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수준은 기재(記載, description), 목록(list), 생물상(biota) 등 기초 분류가 많았다.¹⁵ 흥미롭게도 조선박물학회의 영어 표기는 Chōsen Natural History Society였다. 이는 당시에는 natural history를 박물학으로 칭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33년 5월 조선인 박물학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선박물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박물연구회는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조선인 박물관사와 기타 박물학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학술단체로서 주요 사업은 박물 명칭의 사정(査定), 서적 발행, 강연회, 전람회의 개최, 연구 여행 및 실험 표본의 선정·교환 등 학술 연구와 민중에 대한 과학 지식 보급 등이었다.¹⁶ 1935년 1월 당시 회원 수는 모두 25명으로 연구 분야에 따라 동물부와 식물부로 나누었는데, 이는 당시 박물학이 사실상 생물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¹⁴ 김동필, “한국 과학교육의 시대적 변천”, 『과학교육연구논총』 1 (1976), 46-74 중 62.

¹⁵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분석은, 이병훈·김진태, “서양 근대 생물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동물분류학회지』 10:1 (1994), 85-95를 참고할 것. 이 논문에는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실린 318편의 논문 중에서 동물에 관한 233편의 논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실려 있다.

¹⁶ “각 학교 박물관원 망라 박물관연구회 창립 우선, 동식물 명칭의 사정부터”, 『동아일보』, 1933. 6. 27.; “학술단체의 참모 본영 경성박물연구회”, 『동아일보』, 1935. 1. 2.; “사계 권위자들이 단결 조선박물연구회 창립”, 『조선일보』, 1933. 6. 27.; 우리 학계의 새문헌 조선식물명집”, 『조선일보』, 1936. 11. 5.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박물학은 동물과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¹⁷ 19세기 중반부터 학술적 용어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박물학은 특히 일본에서 동식물과 지질, 광물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해되었고, 1911년 게일(J.S. Gale)이 편낸 『한영사전』 재판에도 박물학은 “natural history school”로 설명되었다.¹⁸

박물학 혹은 생물학은 한국에서 근대과학이 도입된 이래 가장 활발하게 한국인들이 활동했던 분야 중 하나였다.¹⁹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연구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던 당시 생물학 상황 덕분에 다양한 배경의 한국인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한반도의 자연을 이해하는 기본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했다. 박물학은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드물게 지역적인 특수성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이 보여주는 전시물도 큰 틀에서는 지구 혹은 해당 국가의 자연이라는 점에서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의 자연상이 반영된 고유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1930년대 곤충학자 김병하, 조복성을 비롯한 조선인 학자들은 “자연과학관” 혹은 “과학박물관”을 건설하고자 했다.²⁰ 이들이 구상한 기관은 “주로 박물, 동, 식물, 광물에 대한 것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관련 연구를 통해 지식을 집대성하는 공간이었다. 이는 사실상 자연사박물관을 의미했으며, 이들은 단순한 전시가 아닌 과학적 발견과 연구를 통해 “조선 과학 구현”에 기여할 기관을 기대했다.²¹

한반도 최초의 과학관은 1927년 설립된 은사기념과학관이다.²² 이 기관은 동식물에서 토목건축, 조선, 기계공학, 전기, 요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으며, 특히 일상생활과 산업과 관련된 전시물이 많았다.²³ 이처럼 은사기념과학관의

17 박물과 박물학의 개념 형성사에 대해서는, 허재영, “근대의 ‘박물’ 개념 형성과 박물학 교과서”, 『우리말연구』 66 (2021), 77-106 참고.

18 같은 논문, 79.

19 문만용,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의 전개와 의미”, 『탐라문화』 40 (2012), 33-75.

20 “자연과학관을 건설코저 준비노력”, 『조선일보』, 1933. 1. 31.; 이승우, “문화투자의 신방면과 그 구체안 과학박물관의 설립을 제창함”, 『동아일보』, 1936. 1. 11.

21 “과학박물관 명칭의 통일”, 『동아일보』, 1936. 1. 1.; “자연과학관을 건설코저 준비노력”, 『조선일보』, 1933. 1. 31.

22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일제강점기 은사기념과학관의 과학보급사업, 1925-1945”,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정인경,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문화의 식민지성: 국립과학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23 국성하, “은사기념과학관 과학교육의 의미 연구”, 『교육사학연구』 15 (2005), 1-18.

소장품이 광범위한 데에는 충분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박람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해 기증품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초 은사과학관의 설립 취지나 목적은 당시 첨단 과학기술 및 최신 산업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나, 설립 자금 부족으로 전시물 구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부족한 전시물 확보를 위해 대중을 상대로 전시물 기탁을 공모했고, 비교적 수집이 손쉬운 표본이나 화석 등이 다수 기증 및 수집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사 부분의 전시가 강화되었다. 실제 과학관이 1932년부터 펴낸 기관지 『과학관보』 1호에 희귀한 나비 사진을 실는 등 한반도의 자연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으며, 과학관 내에서 박물관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편이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한국인 연구자들은 조선박물관회를 인수하여 지질·광물 분야를 제외하여 조선생물학회를 발족시켰으며, 이 학회의 초대 회장에는 도봉섭, 부회장에는 조복성이 취임했다.²⁴ 또한 은사기념과학관은 미 군정으로서 이관되어 1945년 10월 13일 국립과학박물관(National Science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관장은 곤충학자 조복성이었으며, 동물학부, 식물학부, 화학부 등 10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었다.²⁵ 1945년 11월 조복성이 관장으로, 이듬해 5월 석주명이 동물학 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미 군정으로부터 공식 발령을 받은 과학관 인사는 현재까지 두 명만 확인되었다.²⁶ 동물학부는 1946년 6월부터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 연구보고』를 펴냈으며, 이는 이듬해 8월 2권 3호까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여기에는 조복성과 석주명 등이 발표한 분류학 분야의 보고서와 강영선이 발표한 동물 생리학 분야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과학박물관의 동물학부 이외의 부서가 이러한 보고서를 펴냈는지는

²⁴ 일제 강점기 대표적 박물관자인 조복성에 대해서는,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관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2 (2008), 353-381.

²⁵ “국립과학박물관의 하는 일”, 『과학나라』 1:2 (1947).

²⁶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이 발표한 “임명사령(任命辭令)”에서 국립과학관 관련 인물은 조복성과 석주명만 등장한다. 1945년 11월 6일 조복성의 발령 사실을 밝힌 임명사령 28호의 국문판에는 임명직명을 과학박물관장이 아닌 “과학관장”으로 기록했다. 반면 1946년 7월 11일 석주명의 발령이 담긴 임명사령 101호에는 “국립과학박물관의 동물학연구사”로 기록했다. 두 자료 모두 영문 명칭은 Science Museum으로 동일했다.

²⁷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연구보고』 창간호부터 2권 3호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학박물관 전체에서 동물학부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음을 보여주며, 실제 국립과학박물관은 당시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관 중 하나였다. 한국의 첫 번째 근대 식물학자로 불리는 정태현이 식물학부에서 근무하는 등 국립과학박물관은 자연사 분야의 역할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석주명을 비롯한 생물학자들은 국토를 구명(究明)하는 학술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그 결과물은 과학박물관에서 발표되었다.²⁸

1949년 7월 국립과학관 직제 공포와 함께 국립과학박물관은 국립과학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영문 이름은 National Science Museum으로 동일했으며, 조직이나 인적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²⁹ 과학박물관이 과학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1월 설립된 국립민족박물관, 1945년 12월 설립된 국립박물관이 이미 존재했고, 국립과학박물관은 이들 기관과 유사한 박물관이 아닌 자연을 다루는 과학 관련 기관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관 직제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와 조사 및 과학의 보급향상에 관한 사항을 관장”(2조)하며, 연구부에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고생물학, 천문학, 지질학, 화학, 전기학, 기계학, 가사학 및 공예학에 관한 연구실”(8조)을 두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발발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립과학관은 폭격을 받아 건물과 소장품이 불에 타는 등 큰 타격을 받았으며, 동물학부 부장 석주명은 과학관 재건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 불의의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후 과학관은 사실상 이름만 존재하는 기관이 되었다.³⁰

은사기념과학관과 이를 이은 국립과학박물관, 그리고 국립과학관의 활동에서 자연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였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은 여러 과학과 산업을 포괄하는 복합·종합 과학관의 성격을 지녔고, 그 속에서 실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자연사 분야는 기관의 인력 구성에서 기동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당시 과학 활동의 시대적 양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비록 기관명에

²⁸ Jaehwan Hyun, “Reconfiguring Mountain Expeditions: The Transwar Origins of the Korean Nature Conservation Movement, 1926 - 1962,” *Korea Journal* 62:3 (2022), 79-115.

²⁹ 1947년 5월부터 1950년까지 간행된 『과학나라』에 실린 “국립 과학박물관이 하는 일”과 “국립 과학관이 하는 일”은 기관명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

³⁰ “간판만이 영성하게 달린 남산의 과학관”, 『동아일보』, 1961. 1. 16.

는 자연사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이들 기관의 중심 활동은 자연사박물관의 그것과 많은 부분이 겹쳤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과학관의 인적·물적 자산에 큰 피해를 주었고, 신속한 복구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과학관은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3. 국립과학관 재건 노력: 자연사박물관 vs. 과학·문화센터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1955년에 이르러 정부는 과학관 재건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0년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국립과학관을 세우기로 확정하고, 1962년 8월 전시장 일부를 준공하여 국립과학관을 재개관했다. 하지만 전시를 위한 건물이나 소장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실상 개관 휴업 상태였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중반 DMZ 생태조사와 함께 추진된 국립과학관 재건 시도를 통해 과학관은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의 대표와 미국 학술원의 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국 학술원 및 한국학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동물학자 쿨리지(Harold Jefferson Coolidge Jr.)와 한국 생물학자들의 지속적 교류에 힘입어 DMZ 생태조사가 추진되었다.³² 1966년 6월 “비무장지대의 자연보존과 야생생물의 생태 조사 및 한국과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미국 학자 18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일부는 한국에 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의 조류, 야생동물, 식물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³³ 또한 1966년 9

³¹ “동면하는 국립과학관”, 『조선일보』, 1963. 2. 7.

³² 문만용, “비무장지대 생태조사의 의의와 전망”, 『대동문화연구』 106 (2019), 35-64; Jaehwan Hyun, “Brokering Science, Blaming Culture: The US - South Korea Ecological Survey in the Demilitarized Zone, 1963 - 8,” *History of Science* 59:3 (2020), 315-343.

³³ 최근 현재환은 DMZ 생태조사에서 비롯한 국립공원 설립 역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반공·개발 외교(anti-communist and developmentalist diplomacy)와 IUCN의 생태학적 외교(ecological diplomacy)의 관계를 추적했다. Jaehwan Hyun, “Negotiating Conservation and Competition: National Parks and ‘Victory-over-Communism’ Diplomacy in South Kore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published online in (2023), 1-17.

월 한미 양국의 실무자와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관 건립 협의회”가 문교부의 주최로 개최되어 과학관의 재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미과학관협회 회장 패터슨(Joseph Allen Patterson)을 비롯한 미국 측 전문가들은 과학관의 임무, 전시분야, 운영, 시설, 직급체계와 직원 훈련 등 과학관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그들은 국립과학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한국의 자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자연과학의 한국적 전통을 발굴 계승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자연사와 인류학에 관한 자료를 조속히 수집하여 사라져가는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며 이와 더불어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자료를 수집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³⁴ 하지만 문교부는 미국 과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국립과학관을 자연사박물관, 과학센터,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자연교육원과 수족관 등의 부속시설이 갖추어진 구성된 동양 최대 규모의 과학관으로 건립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은 1년 동안 양국의 협의와 연구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³⁵

패터슨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969년 8월 초까지 머물며 국립과학관(The Korean National Science-Cultural Center) 건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³⁶ 패터슨은 미출판 회고록에서 한국 정부 고위층의 부패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³⁷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고위 인사가 과학관이 자리 잡고 있던 창경궁 근처에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과학관이 들어서게 될 경우 이 구상이 무산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터슨의 과학관 설립 노력을 여러 방식으로 방해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패터슨이 한국에 머물던 기간에 국립과학관장을 맡던 김유진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의심은 더 강해졌다.³⁸

하지만 과학관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미국의

³⁴ 정인경, 앞 논문, 120.

³⁵ “과학관 건립 협의회 개최”, 『동아일보』, 1966. 9. 3.; “과학건립예산 1년 후 결정”, 『매일경제』, 1966. 9. 16.; “현대 국립과학관 재건립 추진”, 『매일경제』, 1966. 10. 27.

³⁶ 패터슨의 미출판 회고록에는 “The Korean National Science-Cultural Center”라는 기관명이 인쇄된 편지지가 등장한다.

³⁷ Louise Hodgson and Joseph Allen Patterson, “Small Candle in Korea” (1974). 이 책은 패터슨이 “Corruption Begins in the Blue House”라는 제목으로 1970년에 작성한 원고를 호지슨과 재정리한 책이다. 두 원고 모두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엔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 확보에 도움을 준 전승희 교수께 감사드린다.

³⁸ “국립과학관장 구속”, 『조선일보』, 1969. 2. 9.

재정적 지원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컸다. 1966년 쿨리지가 방한했을 때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100-150만 달러를 토대로 동양 최대의 과학박물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이에 대해 쿨리지가 기자회견에서 바로 부인했으나 미국의 지원설은 이후에도 계속 보도되었다. 패터슨은 1967년 5월 미국에서 비영리 기관인 The American Friends of the Korean National Science Cultural Center를 설립하여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과학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다.³⁹ 이 기관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미국의 원조와는 거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과학관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DMZ 생태조사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본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유로 제시되었지만,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스미소니언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재정적 문제도 한몫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1967년 “CIA 스캔들”로 인해 포드재단, 아시아재단 등이 문화 냉전의 기획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작용했다.⁴⁰ 따라서 과학관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미국 측도 별도의 원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패터슨에 의하면 워싱턴에서 제기된 KIST 프로젝트의 뒷수습을 해야 했던 한미경제협력위원회(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 대표도 한국의 국립과학관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KIST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⁴¹

신설될 과학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패터슨과 한국 측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구상을 갖고 있었다. 패터슨에 의하면 과학관 설립을 위한 한국 대표단은 강영선을 비롯해 자연과학에 치우친 인적 구성을 보였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 광범위한 컬렉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자들이 자연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패터슨은 제한된 비용과 예산에서 “일반 대중이 과학과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natural history mu-

³⁹ “Joint Committee Studies Science Museum Plan,” *Korea Times*, 1967. 5. 10.

⁴⁰ 文晚龍, “冷戰空間の再発見 一非武装地帯(DMZ)における生態系調査の科学政治”, 森口(土屋)由香・川島 真真・小林 聡明 編, 『文化冷戦と知の展開: アメリカの戦略・東アジアの論理』(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22), 253-277.

⁴¹ Hodgson and Patterson, op. cit., 3장.

seum”이 아닌 “science-cultural center”가 필요하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과학관의 소장품은 인류학, 생명과학, 식물학, 지질학, 동물학, 한국 문화사,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때문에 자연과학자 이외의 인력 참여를 중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의 구상은 모두 구체화되지 못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세워보겠다는 패터슨의 과학관 설립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 1967년 과학기술처가 설립되면서 그동안 문교부 산하에 있었던 국립과학관이 1969년 4월 3일자로 과학기술처로 이관되면 기존 확충 사업과 전시기획 구상은 모두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관에서 생물학 분야를 연구하던 연구원 4명이 모두 중·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⁴² 이 때문에 과학관의 자연사 연구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⁴³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처는 국립과학관을 연구가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를 본령으로 하는 기관으로 이해했다. 1966년 KIST가 설립되어 산업기술 연구를 막 시작하던 상황에서 과학기술처는 한반도의 자연에 대한 일종의 기초 연구를 과학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⁴⁴

1970년 11월 30일 과학기술처는 『과학관 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주요 산업품의 전시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립과학관이 산업제품의 전시를 강조하고 “사업체와의 유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는 산업전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전시를 개관할 때 수많은 관람자가 있으리라 기대되며 그들은 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고 돌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클 것이라며 생활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42 이병훈, 『유전자 전쟁의 현대사 산책』 (사이언스북스, 2015), 24.

43 국립과학관 소속의 교육연구사 자격으로 1968년 9월부터 11개월간 The Institute of Technical Interchange of the East-West Center의 초청을 받아 박물관 요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이병훈은 귀국 전 42일간 31곳의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스미소니언에 제출했고, 스미소니언은 이를 특별 간행하여 교육용으로 쓰고자 했다. Byung-hoon Lee, *A Study of Science Museu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Educational Programs* (A Special Publication of the Office of Museum Programs,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연도 미상).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병훈이 귀국했을 때, 과학관은 그를 일선 학교 교사로 발령을 냈다.

44 과학기술처에 비해 천연기념물을 관장하는 문화재관리국이 속한 문화부는 한국자연보존연구회를 통해 1970년 『한국의 자연』 간행을 지원하고, 1972년 DMZ 인접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지원하는 등 생물학자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공문을 각 기업체에 보냈다. 이후 1972년 9월 8일 재건립된 국립과학관은 농업, 임업, 축산, 요업, 건축, 교통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첨단산업과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1973년 산업기술 전시동의 건립을 추진하고, 1977년 “청소년들에게 중화학공업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화학 공업단지 모형을 전시해 철강, 전자, 기계, 화학, 비철금속, 조선 등 공장의 특징과 이들이 경제발전과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함으로써 “누구든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⁴⁵ 그리고 이 구상은 1979년 7월 19일 “산업기술관”의 개관으로 현실화되었고, 개관식에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하던 박근혜가 참석하여 “전국민의 과학화” 휘호탑 제막식도 가졌다.⁴⁶

이처럼 과학기술처는 문교부의 이전 구상과는 달리 국립과학관이 한국의 기술발전을 보여주는 과학센터로 기능하기를 바랐고, 이 때문에 기존 과학관에서 생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자들이 떠나면서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멈추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재건을 추진하던 국립과학관이 한국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과학관의 핵심 기능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자, 특히 자연사의 중심 분야인 생물학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여러 선진국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목적에 따라 과학관, 과학센터,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당시 한국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한 종합과학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산업화와 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자연사 분야의 위상은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4. 공론장에 등장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과학자와 문화부의 협력

45 정인경, 앞 논문, 121-136.

46 “산업기술관 개관 대통령 큰영에 참석”, 『동아일보』, 1979. 7. 20.

47 이창진·조준오, “한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방안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31:6 (2010), 656-670 중 660.

이처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맞물려 국립과학관이 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전시로 쏠리고 있었음에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우선 1969년부터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발기가 시작되어 1973년 민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자연사박물관이 개관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은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산골과 낙도의 토종 및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전시 및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했다.⁴⁸ 1970년대 후반에는 지질학자 김항묵과 김봉균 등이 정부에 “자연사박물관(공룡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⁴⁹ 같은 시기 국립과학관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이병훈은 과학관이 전시에 치중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⁵⁰ 이는 한반도의 자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체대로 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자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1980년대 들어 여러 학자가 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김항묵 등은 구 중앙청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연사박물관을 병설하여 종합박물관으로 도약할 것을 요구해서 박물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또한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과학관, 각 대학박물관에 자연사박물관 병존 설치를 건의하여 정부로부터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⁵¹ 이병훈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국의 자연사와 과학기술사의 학술적 연구센터”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으며,⁵² 1987년 한국고생물학회는 인터뷰를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이 시급함을 주장했다.⁵³ 특히 이병훈은 올림픽 개최 국가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⁵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5년 문화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선진문화 한국을 성취하는 기본전략을 담은 『문화발전장기정책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류문화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해양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6·25전쟁기념관 등 다

48 “자연사박물관의 김현규 박사 한눈에 보는 자연의 세계”, 『동아일보』, 1973. 12. 17.

49 김항묵,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추진활동 연혁 - 설립발표가 있기까지”, 『자연사한 경학회지』 1:1 (1993), 180-181.

50 이병훈, “환경문제와 과학관의 역할”, 『과학충남』 2 (1979), 1-7.

51 김항묵, 앞 글.

52 이병훈, “과학박물관 진흥육성 아쉽다”, 『한국일보』, 1982. 3. 31.

53 “회원단체 탐방: 한국고생물학회 김봉균 회장과 함께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시급”, 『과학과 기술』 1987. 11.

54 이병훈, “첨단 자랑하는 「오류국민」이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 없으니”, 『전자시보』, 1988. 7.

첫 개 박물관의 건립이 포함되었다. 이는 1990년 초 용산 미8군 이전 부지 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과 함께 이들 박물관을 함께 건립하여 박물관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다. 정부 부처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2년도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 신청이 경제기획원의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⁵⁵

1990년대 들어와 학자들의 자연사박물관 설립 요구가 점차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관련 협회를 조직했으며, 1990년 9월 한국동물분류학회 등 11개 학회가 “한국의 자연연구와 국립중앙자연사박물관의 발전방향”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연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이듬해 1월에는 21세기 위원회에서 주최한 사회·문화 분과 대통령 간담회에서 자연사 및 인류사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문화부 내에 실무 기획단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후 2월에는 참여 학회를 26개로 늘려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로 확대하고, 당시 서울대 총장이자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인 조완규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자연사 연구와 사회교육의 중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수도 서울에 건립되어야 하고, 이는 자연사 전문가, 박물관 학자, 교육 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 위원회와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족 취지 및 건의문을 발표했다.⁵⁶

비록 1992년 문화부의 예산 신청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학계는 차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자연사박물관 설립 취지 및 건의문을 지속해서 채택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논리와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의 정책연구로 “한국의 자연 특성 연구와 자연 교육을 통한 국민과학화의 효과적 방안”을 수행했으며, 이 연구 결과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 발간되었다.⁵⁷ 1995년 7월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는 자연사박물관연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자연사박물관의 역할과 과학교육”이라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⁵⁸

55 이병훈,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국립자연박물관 추진의 현대사』, 158-160.

5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의 21세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전략』 (2003), 14-15.

57 국립자연사박물관설립추진위원회,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3).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약 십 년 동안 국립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크게 늘었다. 이들 보도는 자연사박물관의 중요성과 건립 필요성, 건립계획 등을 다루었는데, 특히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진 레토릭 중 하나가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였다. 처음에는 언론 기고문에 등장했으나, 점차 각종 기사와 보고서 등에서 재인용되면서 이 표현은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⁵⁹ 이러한 문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확산된 데에는 한국에 초청된 해외 자연사박물관 관계자들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90년 10월 국립중앙과학관의 개관행사에 참석한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장 닐 차머스(Neil Chalmers) 관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천만의 인구에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한국에 이런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으며,⁶⁰ 이듬해 1991년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헝가리 자연사박물관 관장 쿠바섹 야노슈(Janos Kubassek) 박사는 “한국과 같이 훌륭한 과학자가 많고 경제력도 있는 나라에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와 박물관 간 교류를 위해 세계 50여 개국을 방문해 봤는데 대부분 자연사박물관이 있었다”며 한국 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⁶¹

문화부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과학기술처는 과학관을 내세워 자연사박물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 국립중앙과학관이 대덕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전시관에 맘모스와 인류 원인 등을 전시하게 되면서 국립중앙과학관이 한국자연사박물관 역할을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1993년 12월 국립서울과학관에서 “공룡특별전”이 개최되면서 국립서울과학관을 자연사박물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1994년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과학기술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예산상의 이유로 별개의 자연사박물관 설립보다 국립중앙과학관 내의 자연사부 즉, 자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⁶²

58 이병훈 『자연사박물관과 생물다양성』 (사이언스북스, 2000), 163-168, 227-234.

59 이병훈,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 『동아일보』, 1990. 7. 5.

60 “영 자연사박물관장 닐 차머스 박사, 한국도 자연사 연구에 관심 높일 때”, 『동아일보』, 1990.

10. 10.

61 “한국도 자연사박물관 세워야”, 『조선일보』, 1991. 6. 26.

62 이병훈,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국립자연박물관 추진의 현대사』, 175-181.

이러한 각계의 다양한 논의를 배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선 1995년 3월부터 국회 본회의 및 분과 회의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조기 설립과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문제를 계속 검토했다. 당시 문화부 장관 주돈식은 중장기적으로 문화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⁶³ 6월 20일 문화부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부가 주관하여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 6개 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법정 부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까지 충분한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2000년 이후에는 민족 자연사를 총망라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⁶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22일 문화부 장관의 주재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진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 이 위원회는 당시 김도현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운영, 동물, 곤충, 식물, 고생물, 광물·지질, 인류 등 7개 분과 24명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⁶⁵

과학계와 일부 정부 부처가 추진했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학계뿐 아니라 문화부에도 희망적 징조였다. 이에 문화부는 1995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1999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연구·수집에 주력하고, 박물관 건립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발표했다.⁶⁶

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문화부는 1996년 예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타

63 제14대 국회 제172회 제8차 국회 본회의 (1995. 3. 3.) 중 3. 사회·문화에 관한 질의.

64 제14대 국회 제176회 제1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5. 7. 13.).

65 이선민,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추위 발족”, 『조선일보』, 1995. 8. 5.

66 제14대 국회 제177회 제6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5. 10. 30.).

표 1. 연차별 투자계획 [출처: 제14대 국회 제177회 제6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5년 10월 30일), 41.]
(단위: 백만원)

연도	96	97	98	99	2000 이후	계
예산	360	450	500	500	198,190	200,000

당성 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 연구비로 3억 5,952만 원을 계상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한국건축가협회, 1996),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한국건축가협회, 1996) 등의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계획보다 적은 예산을 계상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위 표에서 보듯 1997년에 4억 5천만 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1997년 예산심의에는 약 1억 5천만을 계상했다. 문화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3억 500만 원이 늘어났지만, 자연사박물관 예산은 스스로 감액해서 예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문화부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하면서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자연사박물관의 조기 건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⁶⁷ 그럼에도 문화부는 1997년 해외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전액 감액했다. 이러한 문화부의 예산 감액에 대해 전문위원과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질타했다.⁶⁸

이처럼 문화부가 국회에 상정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던 국립자연사박물관 사업은 문화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재촉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IMF 사태라는 초유의 외환 위기는 이 사업에 결정타를 가했다. 문화부는 1998년에는 1995년 연차별 계획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했으나⁶⁹ 이마저도 실제 예산 배정에서는 모두 삭감되어 1998년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질타하자 문화부 장관 신낙균은 IMF 경제 위기 및 문화 부분의 예산 투자 규모 등을 이유로 예산 당국이 삭감했다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⁷⁰ 이처럼 문화부가 처음의 연차별 계획보다 낮은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로 더 적은 예산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위원과 국회의원

67 제15대 국회 제181회 제6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6. 11. 4.).

68 제15대 국회 제185회 제2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7. 9. 23.).

69 제15대 국회 제185회 제4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997. 10. 30.).

70 제15대 국회 제198회 제9차 문화관광위원회 (1998. 11. 19.).

들이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이에 대해 문화부가 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패턴은 2000년대 말까지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1999년까지는 조사연구를 완료하고 2000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사 및 정책연구만 진행되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대지 선정방안 연구』(1997), 『국립자연사박물관 표본자료 수집 및 제작방안에 관한 기초연구』(1998), 『국립자연사박물관 전시계획 기초연구』(1998), 『국립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프로그램 기초연구』(1998) 등만 추진되고 실제 설립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화부가 사업 추진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등의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밀리면서 필요한 기초 조사만 진행한 결과였다. 물론 이 과정에는 1997년 한국 사회 전반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던 외환 위기라는 커다란 외부적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한편으로 문화부 자체에서도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 및 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5.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의 장애물: 경제성과 중복 사업

1995년 대통령의 관심으로 추진력을 발휘하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IMF 사태라는 외부 변수와 문화부 내부의 문제로 추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재정과 공공 부문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9년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새로운 장애물로 부각되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⁷¹ 예타는 재정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2001년 수행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는 “국민경제자원에서의 경제성이 0.3, 개인 사업자 차원의 재무성은 0.1의 B/C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제성이 낮아”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⁷² 경제성이 낮은 이유는 건축·표본수집·운영

71 예비타당성 조사의 변천과 쟁점에 대해서는, 김태운·조예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행정논총』 56:2 (2018), 279-311 참고.

72 유경준 외, 앞 보고서, 35.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및 과학기술부의 과학관 건립 사업과의 중복성도 문제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과거지향적인 자연사(natural history)가 아니라 교육과 미래지향적인 자연과학(natural science)로(sic) 박물관의 명칭을 바”꾸고, 현재 동시에 타당성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국립과학관 건립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⁷³

예타의 부정적 결론을 받고 26개 학회와 단체로 구성된 자연사박물관협회는 2001년 8월 2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처 간 조정으로 본래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이 통합적으로 발전·실현되도록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게 발송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26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의 주관으로 과학기술부, 문화부, 환경부의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민간 전문가들은 예타의 권고에 따라 중복투자를 피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적 단일한 조정,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에 각 부의 관계자들은 각 부처의 사업들이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모임을 주관한 정책기획위원회는 종합 조정을 감당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기구의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자리를 마무리했다.⁷⁴ 그러나 이후에도 그 어느 부처도 조정에 나서지 않았고, 유사 사업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피하고 능률과 효율을 고양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논리와 취지도 부서간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학자들은 청와대와 문화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16대 대통령 대선 후보들에게도 관련 서한을 보냈다. 노무현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였고, 이듬해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으로부터 건립 추진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연구 용역의 기회를 받았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추진 부서인 문화부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과 잘못된 전략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치밀한 기획이 부재했고, “자연사 전공자 외의 국민 전체를 위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개념 부재”를 지적했다.⁷⁵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

⁷³ 같은 보고서, 35.

⁷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의 21세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전략』 (2003), 13.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예타 보고서에서 중복 사업으로 지적되던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및 과학기술부의 과학관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2002년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조사 발굴 및 기반 연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국립생물자원관(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을 2007년 인천의 종합환경단지 내에 공식 발족시켰다.⁷⁶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Journal of Species Research*를 발간하는 등 한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및 홍보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7년부터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생태원(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설립을 추진하여 2013년 충남 서천에서 공식 출범시켰다.⁷⁷

그리고 2008년에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에는 “자연사관”이 들어서게 되었고, 국립중앙과학관은 2017년 “자연사관”을 개관함으로써 과학관에서 자연사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의 한국 사무국을 두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실물 및 정보의 확보와 관리,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자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 NARI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를 국립수목원과 함께 펴내면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관들이 연이어 세워졌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

⁷⁵ 같은 보고서, 36.

⁷⁶ 국립생물자원관은 기본계획시는 총 사업비가 465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본설계에서 총사업비가 6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검증』(한국개발연구원, 2003).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기존 자연사박물관과 국립과학관의 주 기능은 전시 및 교육이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표본을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표본자료의 축적과 연구이기 때문에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⁷⁷ 국립생태원 조성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에 의해 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으로 지정되어 이미 추진이 확정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었다. 『국립생태원 조성 사업 계획 검토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07).

건립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5년에는 10여 개의 지자체가 자연사박물관 유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분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문화부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예타 결과를 비판하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분산 건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⁷⁸ 하지만 분산 건립에 대해 상당수 과학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이 계획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후에도 박물관 단지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의지를 이어갔다. 2009년에는 용산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11년에는 행정도시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 사업에 자연사박물관을 포함시키고 관련 조사 연구를 계속했지만 역시 낮은 경제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최근 문화재청이 국립자연유산원 설치에 매진함으로써 문화부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에서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낮은 경제성과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은 현재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설치 시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6. 맺음말

한국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은 해방 직후의 국립과학박물관 시절부터 과학관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국립과학박물관의 핵심 인물이나 주요 활동은 자연사박물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장품이 파괴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면서 과학관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 국립과학관이 재건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의 홍보·전시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과학관과 자연사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연사박물관이 전시나 교육뿐 아니라 연구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믿었고, 이 때문에 과학관을 기본적으로 홍보의 공간으로 보는 과학기술자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어려워졌다. 그 결과 과학기술처가 아닌 문화부가 과학자들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부는 이미 천연기념물과 한국자연보존연구회를 통해 자연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문화부와 과학계의 협력 속에 1990년대 중반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

78 문화관광부, 『국립자연사박물관 지역별 분산건립 타당성 연구』 (2005), 6.

함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화부가 신축을 준비하던 국립중앙박물관에 힘을 쏟으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설에 다소 소극적이 되었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는 가시화되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중단시켰고, 이후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은 더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설립된 이후 한반도의 자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이러한 역할 중복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관의 자연사 연구가 사실상 자연사박물관의 씨앗인 셈이지만, 과학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처가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을 과학관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면서 그 씨앗은 제대로 받아하지 못했고,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은 여러 부처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여러 유사 기관이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한국은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OECD 국가라는 레토릭 아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사박물관의 성격과 기능은 국립과학관의 역사와 뿌리를 함께하며 긴밀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립자연사과학관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연대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과학관과 독립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과학관이 자연사관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립과학관은 해외의 과학관과는 다르게 과학기술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의 기능과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과학센터의 기능과 더불어 자연사박물관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과학관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립과학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긴밀한 관계가 역설적으로 독립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30여 년이 되어가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에 맞닥뜨린 것이다. 동시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넘어야 될 주된 장벽이다. 한국의 자연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는 오랜 레토릭이 더 이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국내에는 자연사박물관을 표방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설립되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OECD 국가인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없다.⁷⁹ 물론 일본은 지구관과 일본관으로 구성된 국립과학박물관이 사실상 자연사박물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국립과학관이 자연사관을 갖추고 관련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단순히 “한국만 없다”는 논리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개발에 복무하는 산업기술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연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다변화된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생물다양성 등 자연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국립중앙과학관과 문화재청이 “한국판 스미소니언”과 “부산판 스미소니언”이라는 수식어 아래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과학관과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유산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가능성이 높지만, 기관명에 자연사를 담고 있는 국립자연사과학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비록 과학관이 한반도의 동식물에 대한 많은 소장품을 갖고 있고 관련 전시 경험도 풍부한 편이지만, 그동안 시도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노력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자연사과학관 혹은 자연박물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미 지적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투고: 2023년 11월 01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27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24일)

79 일본의 국립과학박물관 설립 당시에도 전시에 중점을 둔 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학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 규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가네코 아쓰시, 박과연 외 옮김,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2009), 109, 139.

The Road to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museums and natural history museums

SHIN Hyangsuk (National Science Museum)

MOON Many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post-liberation South Korea, the role of natural history museums has been closely linked to the nature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However, natural scientists in Korea believed that natural history museums shoul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earch, which led to disagreements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saw science museums primarily as public-facing institutions. As a result, scientists pushed for a natural history museum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t this was halted due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2001 highlighted problems of low economic feasibility and overlap with existing institutions with similar functions. As a result, th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is yet to be established. The Korean National Science Museum is characterized as a comprehensive science museum that includes the functions of a natural history museum in addition to the functions of a science center that displays scientific artifacts and make scientific principles tangible,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ural history museum. Therefore, the rhetoric that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out a natural history museum is no longer effective. It is now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identity of a natural history museum through historical analysis of previous attempts to establish one, and to explore new approaches to overcome existing obstacles.

Keywords.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National Science Museu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